

### 전남서 주저않는소 대량 발생...

98마리 모기 전염병 진단 소가 잇따라 발생해 보건당국을 긴장시켰으나 모기에 의한 전염병인 것으로 밝혀졌다. 8월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순천, 곡성, 구례, 화순 등 84개 농가에서 98마리의 소가 기립 불능 증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가 기립불능 증상을 나타내는 소를 검사한 결과 소 해면상뇌증(일명 광우병)이 아니라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인 것으로 최종 진단됐다.

모기가 옮기는 소 전염병에는 아이노바이러스감염증, 아까버네병, 쥘잔병, 소유행열 등이 있으며 성우에는 발열, 기립불능, 신경증상을 나타내고 임신우에는 유산, 조산, 사산 및 허약우 출산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이같은 질병은 전남 뿐만 아니라 전북, 경남에서도 발생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8월 27일 소 모기 매개질병 발생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전남축산기술연구소는 소 사육농가에 소 모기매개질병 관련 백신(소유행열·아까버네병) 접종 및 모기 서식처 근절, 축사 방충망 설치 등 가축에 모기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상신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소 모기 매개 질병은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없어 사전에 예방접종과 모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기립 불능증상을 나타내는 소는 도축이 금지돼 있으므로 식용으로 공급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 결렬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 결정이 유업체와 낙농가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8월 25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으로 2가지를 제시했으나 농가와 유업체의 의견 조율 실패로 다음달 초 다시 한 번 소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제시된 개정안은 두 가지로 결정적으로 단백질 구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의 안인 1안은 단백질 구간을 2.9미만, 3.0~3.2%, 3.2% 이상 등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것으로 제7차 소위에서 결정된 설명회 3개 시안중 제1안에 해당한다.

다른 한 개의 안은 기존 1안에 농가 설명회 여론수렴을 반영한 단계적 개선안으로 단백질 가격요소의 구간 3.0%~3.2를 3.0%, 3.1%, 3.2%이상 등 세구간으로 세부화하는 등 단백질 가격요소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안이다.

소위원회측은 이 두 안을 중심으로 소위에서 결정, 1개의 안을 도출해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소위원회에 참석한 유업체 대표들은 농가들의 의견만 반영이 됐을 뿐 유업체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유업체의 의견을 모아 진흥회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농가측도 유예기간 연장 등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평균산차를 고려한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팽팽한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낙농진흥회는 이같은 양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시된 두 개의 안을 중심으로 다음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최종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출범 앞둔 중앙낙농기구 '반쪽' 우려

정부가 마련한 낙농발전종합대책의 핵심인 중앙낙농기구에 유가공업체가 참여 의사를 정하지 못하고 불투명한 입장을 보여 '반쪽 기구' 출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월 23일 낙농진흥회에서 낙농제도 개선 실무회의를 열고 지난 7월 마련한 낙농발전종합대책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으나 유가공업체들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유가공협회에서 의견을 취합, 9월3일 회의 때 입장을 표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공업체들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새로운 중앙낙농기구에 참여하는 유가공업체들은 농가의

쿼터는 물론 쿼터 변동사항을 등록하는 등 영업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 가공원료유 지원 때 그 용도와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가공업체들은 300억원의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의 기한이나 지속 여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생산자들이 주장하는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위원회'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여기에 개별 업체마다 낙농대책에 대한 의견이 달라 통일된 입장을 갖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이처럼 유가공업체의 중앙낙농기구 참여가 불투명한 가운데 농식품부는 일부 유가공업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내년 6월로 예정된 낙농진흥법 개정 때 중앙낙농기구 설립과 가공원료유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낙농발전대책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생산자들은 "중앙낙농기구 참여 여부에 대해 유가공업체가 먼저 의견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며 "또 중앙낙농기구 참여에 소극적인 유가공업체를 끌어들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낙농 전문가는 "새로운 중앙낙농기구가 원유수급 안정을 추구한다면 낙농 산업의 모든 주체가 참여해야 하지만 낙농대책에는 이를 강제하거나 유인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예상된 문제가 불거진 것이며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가공업체들이 쿼터 현황이나 가공원료유 용도·사용내역 등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종합대책안의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 등에 대해 별다른 이점이 없는 것으로 느끼는 것 같다"며 "일부 유가공업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내년 6월 낙농진흥법 개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산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중앙낙농기구 설립 때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위원회와 연간 쿼터총량제 도입 등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상반기 유업계 매출 '그럭저럭'

올해 상반기 유업계 매출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이저 유업체 3개사의 매출실적을 살펴보면 흰우유는 현상유지 수준에 불과하지만 호상 요구르트가 두드러지는 판매 상승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서울우유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전체 매출액은 7,39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우유는 지난해보다 4% 상승한 일평균 200ml기준 797만개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호상 요구르트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45%가량 판매율이 높아진 일평균 100g기준 31만 7,000개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매일유업도 흰우유 판매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발효유에서 두드러진 판매 상승율을 기록했다. 매일유업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발효유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0.8%가량 판매율이 상승하는 등 김연아 선수를 모델로 기용하면서 스타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일유업의 경우 올해 초 분유사건의 여파로 분유판매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매출은 지난해보다 0.69% 상승했지만 이익은 40% 가량 감소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분유판매에서 높은 상승을 보였다. 분유의 경우 지난해보다 40%가량 판매율이 늘어났으며 우유에서도 9%가량 판매율이 올랐다는 게 남양유업측의 설명이다. 남양유업은 특히 새롭게 뛰어난 주스사업에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하며 분유 판매율이 크게 올라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업계의 상반기 매출 실적이 그리 나쁘지는 않은 편이지만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의 실적이 좌우된다고 본다"며 "과징금은 차치하고서라도 담합이 일부 인정된다면 소비자의 동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 LG생활건강, 파스퇴르 유업 인수추진

LG생활건강의 파스퇴르 유업 인수설을 시작으로 대기업의 유업계 진출이 구체화 되면서 유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유업계는 LG생활건강의 파스퇴르 유업 인수설이 유업계의 대기업 자본 유입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업계의 경쟁이 더욱 과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메이저 유업체 중 하나인 A사의 한 관계자는 "LG생활건강이 파스퇴르 유업을 인수하는 것은 야쿠르트가 파스퇴르를 인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동종업계에서는 위협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내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업체의 관계자도 "LG생활건강은 LG라는 굴지의 대기업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의 직원식당이나 식자재로 파스퇴르 우유를 납품만 하더라도 그 수요가 대단할 것"이라며 "LG생활건강이 코카콜라를 인수한 이후 LG 계열사에 코카콜라 자판기가 대대적으로 깔렸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LG의 인프라는 상당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은 2007년 코카콜라음료를 인수하면서 음료부문 사업 확장을 선포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다이아몬드 샘물 인수에 이어 세계적인 유업체 다논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 유업계로 발을 넓히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LG생활건강의 파스퇴르 유업 인수추진은 단순한 인수합병건으로 보기 힘들다"며 "대기업이 유업계에 진출하는 시발이 될 것으로 보며 이후 유제품과 건강음료의 결합상품이 출시되면서 시장의 인기를 끌면 다른 대기업들도 유업계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난달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유제품 업체 인수를 사전검토하고 있으며 파스퇴르 유업을 검토 대상 중 하나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LG생활건강측은 파스퇴르 유업의 최대주주인 한국아쿠르트측과 매각 금액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음 달 중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美 쇠고기 수입량 '통관물량' 이 현실적 국내 언론, 선적물량을 수입물량으로 보도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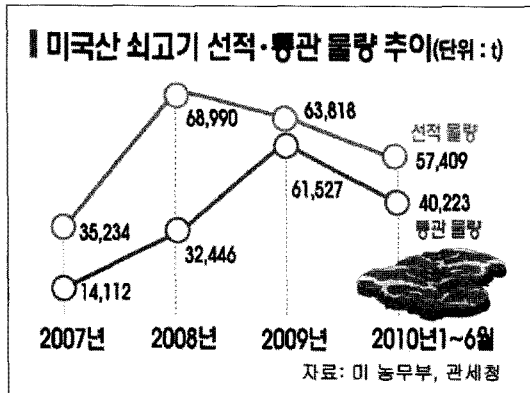
올 상반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국내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으나 실제 우리나라에 '수입 통관' 된 물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러 언론에 미국 농무부의 '가축 및 육류 무역통계'를 근거로 올해 상반기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쇠고기가 모두 5만7,409(12만6,565파운드)으로 2009년 상반기(2만8,152t, 6만2,065파운드)보다 103.9% 증가, 우리나라가 멕시코·캐나다·일본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를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이 수입했다고 보도됐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미국의 '수출 선적' 통계여서 우리나라의 '통관' '검역' 기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이 집계한 올 상반기 미국산 쇠고기 통관 물량은 4만223t이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물량은 3만7,859t으로 앞의 보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국내 시장에 직접 공급되고 소비량으로 추정할 수 있는 수치인 '통관물량'은 언론에 보도된 '수입물량'보다 1만7,200여이나 적다.

이처럼 수입과 수출물량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 즉 6월 말 기준 미국에서 선적한 물량과 우리가 수입한 물량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운송 중이거나 검역·통관대기 등의 물량이 모두 포함돼 시기적으로나 처리 상태에 따라 물량 차이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은 선적물량이나 국내 검역기준 물량보다는 통관기준 물량이 보다 현실을 반영하는 통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정환 GS&J



이사장은 "쇠고기시장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선적기준 물량이나 국내 검역물량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통관기준 물량을 제대로 살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미국산 쇠고기 선적물량 증가와 관계없이 현재의 시장 상황은 미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가 눈에 띄게 달려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식의 보도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축협 조합장은 "언론에서 미국이 선적한 물량을 마치 수입돼 시판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미 쇠고기에 대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더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쇠고기 문제가 잠복된 불씨인만큼 언론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올 상반기 국내 통관기준 쇠고기 국가별 수입현황(관세청 자료)은 호주 7만 7,941(52.7%), 미국 4만 223(29.1%), 뉴질랜드 2만 3,148(16.8%) 등이다. 지난해에는 호주 14만 4,306(58.9%), 미국 6만 1,527(25.1%), 뉴질랜드 3만 6,250(14.8%)을 기록했다.

### 농식품부, 친박 정치인 장관에 '국회소통 윤택' 기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의 취임이후에도 농협법개정이나 쌀처리 문제 등 농식품부의 정책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

농식품부에서는 새 장관이 당·정간 협의와 소통의 창구 역할 등을 톡톡히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핵심 현안으로 걸려있는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 정치인 장관의 역할을 크게 바라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 제

출된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유통)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제도적 개혁 밀그림이 담겨 있다.

이는 새로 바뀌게 될 조직의 이름, 사업구조개편 형태와 시기 등의 문제로 정부와 농협이 오랜 진통끝에 이견을 좁혔지만, 아직도 조율할 부분이 남아 국회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분야다.

게다가 국회 농수산식품위 소속 의원 19명 중 절반에 가까운 8명이 교체되면서 농식품부나 농협이나 처음부터 다시 국회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의 고위 관계자는 "농식품산업 비전 2020' 등 기존 주요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이 그대로 기존 기초를 유지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치인 장관의 취임으로 특히 농협법 개정안 등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촛불사태 이후 쇠고기 파동, 멜라민 파동, 농협비리 사태 등이 마무리 되지 얼마되지 않은 데다 캐나다와의 쇠고기 협상, 과잉 생산된 쌀 처분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어 국정운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의견도 내놓고 있다.

유정복 내정자는 건설교통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 등을 맡아 농림수산 행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초 유임이 예상됐던 최경환 장관이 물러나면서 친박계의 핵심인사인 유 내정자의 발탁이 힘을 얻었다는게 정치권의 풀이다. ☉